

보도설명자료 (‘22. 9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가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했다는 주장은
사실과 다름

(9.29일자 한국경제 「고리원전에 ‘임시 방폐장’ 짓는다」 보도에 대한
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원전 내부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결정함

- 과거 월성원전에 유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
“설문이 시설확충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변경됐다”는 주장 존재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① 원전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·
영구처분시설과 같은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기 전에 한시적으로
운영하는 시설로서 ‘임시 방폐장’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임
- ② 기사에서 언급된 ‘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(안)’
은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내부 실무안임
 - 다만,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
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며,
 - 세계 대부분의 국가*가 오래전부터 검증된 기술로 동 시설을 안
전하게 운영중이고, 우리나라도 '92년부터 월성 원전 내에서 건식
저장시설**을 안전하게 운영중임

- * 33개 원전운영국 중 美, 日, 獨, 캐나다 등 22개국 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중
- ** 사일로건식저장방식(Concrete Silo), 조밀건식저장방식(MACSTOR)
 -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이 붕괴열을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시키고 콘크
리트 및 금속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는 저장 방식
 -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주변 방사선량 시간당 0.09μSv 수준으로 서울 등
대도시권보다 낮은 수준('22.9.26일 기준)

-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('21.12)과 새정부
에너지정책 방향*('22.7)에 따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
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

* (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) 지역과 소통하면서 원전 내 한시적으로 저장시설 확충 추진

- 아울러,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설치절차와 의견수렴 방식 등을
구체적으로 담은 특별법안이 여·야에서 3건 발의*된 바, 법안의
조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음

* ^민김성환 의원 발의('21.9.15), ^국김영식 의원 발의('22.8.30), ^국이인선 의원 발의('22.8.31)

- ③ 또한, 기사 말미에 인용된 ‘과거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의견수
렴 과정의 설문 무단변경’ 주장은 과장·왜곡된 것임

-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은 ‘20.7월 경주시민
145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3주간의 숙의학습 이후 이뤄짐*

* 의견수렴 결과, 81.4%의 시민참여단이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증설에 찬성

- 변경된 설문은 시민참여단 선발을 위해 ‘20.5월~6월경 3,000명의
모집단 선발에 쓰인 것이며,

- 모집단 선발의 핵심문항은 참여의사와 지역·성별·연령 등 인구
통계학적 정보로서, 변경된 설문 문항은 향후 통계분석을 위해
설문 대상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는 질의에 불과했음

- 변경사유 역시 경주시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‘경주지역실행기구’가
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 반영을 요구했기 때문임

※ 문의 : 원전환경과 박태현 과장(044-203-5340)/변재택 사무관(5341)